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4. 17.(화) 16:00~18: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 석) : 전략위원 16명* 및 통계청장
 - * 16명 : 조성준 민간위원장, 민간위원 11명, 행안부 장관, 세종시 부시장,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등
- (주요내용) '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심의 및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 추진계획 보고

□ 회의 주요 의견

- (조성준 위원장)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 정부신뢰 회복을 통한 우리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도 공공데이터 개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국가 차원의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행안부 장관)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총리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데이터 자체가 국민의 재산이라는 관점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던져 두기만 했던 공공데이터들을 잘 가공하여 미래 사회에 끌고 갈 산업의 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9일 정부혁신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께서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공공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민간이 가공,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김영미 위원-실무위원장)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시다만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활성화 측면에서 표준화에 관한 논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산업분야에서의 활용도 제고가 우선되어야 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전략방안에 모색이 되면 좋겠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수조사에 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사 기간이 짧아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작부터 차근차근 여러가지를 담아내어 진행된다면 좋겠다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전수조사 후에도 메타데이터 목록이 민간에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점, 전수조사 시, 데이터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점, 또한, 데이터의 개방가능여부에 대한 기준, 조사 결과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 데이터 품질 제고와 민간 활용에 관한 전략적 방안도 함께 모색이 될 필요성 등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를 활용한 청년창업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분야의 인지도 제고 노력도 함께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시행과정에서 무엇보다 부처 간 협업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와 국가데이터맵 등의 플랫폼 구축과 다양한 데이터들이 호환되는데, 통계청의 다양한 원데이터, 데이터 가공 기술 등의 공동 활용이나 협업 방안이 모색되면 좋겠다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지금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과 수요자 입장에서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이 전반적으로 빨리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민화 위원) 이번 안건에는 이의가 없고 동의하나, 과연 국가 전

체 혁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체감될 까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민간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지 않는 공공데이터는 접근성이 없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가 모두 public, 민간 클라우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에 끌어올리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개방의 걸림돌은 비식별 개인정보입니다. 비식별 개인정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막상 사용할만한 데이터가 별로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공공데이터의 비식별화 공개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비식별 조치가 가능한 중간 처리업체에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정말 사용할만한 정보들이 개방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처별 사일로 현상과 낮은 전문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정부를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트윈 정부를 도입하면, 정부의 각 부처가 현실의 부처와 일대일 대응되는 가상의 부처가 존재하고, 현실의 정부부처에서는 협력이 어렵지만, 가상의 정부에서는 협력이 쉬워져서 부처 간 협업문제가 해소됩니다. 싱가포르의 Virtual Singapore Project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우리도 “Virtual Korea Project”로 대한민국 행정을 한단계 상승시키는 프로젝트를 우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한번 기획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광웅 위원) 정부의 데이터가 좋은 자료인데 활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자료, 국민연금 통계 및 건강보험 통계 등의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복지정책을 맞춤형으로 수립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다른 공공데이터들도 잘 활용하면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데이터 개방은 양적인 확대와,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새로운 제도나 관행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 일자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공공데이터 정책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도 등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세월호 4주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관이 몇 명이나 증가했는지 확인해본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데이터가 없어 확인이 안되거나, 개방 형식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 (이경일 위원)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의견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개방 정책의 방향성을 참고하기 위해 OECD나 ODB 등의 지표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ODB(오픈데이터 바로미터) 관점 중, 우리나라는 다른 관점에 비해 시장이나 사회임팩트(활용)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개방건수는 늘 1등인데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하면 데이터 활용과 산업적 효과가 증진될텐데, 이 부분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중점데이터를 예로 들면, 이번에 추가 개방하는 데이터는 다운로드 수나 접근 통계 등의 활용지수 지표를 강화하여 추이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접근 쪽이 문제인지,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가 개방되지 않고 있는지 등 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개방에서 좀 더 활용으로 가고, 활용은 측정 가능한 형태의 지표를 도입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의 개방 건수나 통합 방법 등에 대한 논의보다 데이터 생성 단계부터 상호운용성이나 데이터 융합을 고려

하여 생성할 수 있는 방법과, 좀 더 미래관점에서 향후 방향성과 현재 데이터에 대한 정체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홍기 위원)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강화, 활용 면에서 개선점을 파악하려면,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크게 3분류로 정부, 대국민, 사업자인데, 이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각각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목적과 활용 시나리오가 없으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관점에서 데이터 에코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나리오에는 메타데이터나, 데이터 schema, linked data 등 사용자를 고려한 운영관점에서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 (조성준 위원장) 데이터베이스 정의서를 작성할 때 말씀하신 사항들을 추가하면, DB 관리자가 다른 종류 데이터와의 Mashup 아이디어나, 어떤 대상에서 관심이 있을지 등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종수 위원) 이번 전수조사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거시적 방향은 잘 잡혀있고 확실한 추진 의지도 있어 보이는데 전수조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담당공무원의 협조와 실제 이용자단에서 의 활용입니다. 전수조사에 협력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사에 많은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결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와 관련된 실무진의 입장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정리하고 추출하여 만들어내고 입력하는 등의 업무가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서의 작성 내용도 너무 많아서 실제적으로 많은 데이터에 대해 과연 정리되어 나올지가 의문인데, 현실적으로 실무단에서 일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용자단에서 보면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샘플 중 DB 설명 란에 어떤 데이터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들어가는데, 이 DB가 구축된 다음 이러한 정보들이 공공데이터포털의 목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수조사의 데이터 목록을 데이터맵으로 만들 때 이용자입장에서 ‘저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이고,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하도록 조사에서 고려해야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정진 위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관별 public service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목적과 오픈포맷, 활용이나 확산 방향 등을 큰 그림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통해 기관별로 제공해야 하는 public service를 적용한 사례들을 단지 사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해 본다면 부처 간 접점이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과 실제로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위한 오픈포맷이나 연합시스템이나 통합시스템으로 되기 위한 인터페이스적인 API의 고충들이 분명히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데이터 활용으로 창출된 서비스의 지속적 확산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적용된 기존 API의 업데이트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컴퓨팅 환경의 변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유지, 보수의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행정 혹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유지, 보수, 확산체제의 확보가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담당인재풀 유지가 이

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하우가 쌓이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IOT를 바라보는 한 시점은 앞으로 EOT(Enterprise of Things), BOT(Brain of Things) 과정으로 진화해간다고 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컴퓨팅 환경은 서비스 기반인 client-server 패러다임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P2P환경인 블록체인을 통해 분산화 되어 서비스 확산이 이루어 진다고 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IT 흐름을 읽어내며 공공데이터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제공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지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smart government를 충분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public service의 실제적인 활용 사례를 통해서, 그 다음 체제는 이민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일럿 프로젝트성이라고 하더라도 virtual한 것이나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행정서비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한다면, 신기술 수용과 변화하는 컴퓨팅 환경 하에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노하우가 쌓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IT변화 흐름에 따른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 (통계청장) 개방된 데이터가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데이터의 확장성이 낮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행안부의 인구등록시스템과 복지부 건강보험, 국세청의 국세자료 등을 융합해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표준화된 형태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상세한 수준으로 융합(Merge)이 되면 정책적으로 함의있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중에서 통계화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맡고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등은 행안부에서 중점으로 하는 등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 (장덕진 위원) 회의 자료에 보면 공공데이터 개방건수가 2013년에서 작년까지 5년 동안 5배 증가하였습니다. 반가운 일이나,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증가하여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년 전, 어떤 광역지자체에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여, 수천 건의 자료에 대한 샘플데이터를 보았더니, 약 90% 정도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한글, 엑셀 등 형식이 다양하고 중간에 데이터가 없는 연도도 있었습니다.

통계청장님의 데이터 융합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반갑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공데이터 민간이용 활성화가 2013년에 13,900건이었는데 작년에 387만 건이 됐습니다만, 제 경험상, 데이터 융합이 어렵거나, 분석단계가 너무 많이 들거나, 국제비교가 불가능하거나, 중간에 없는 연도가 있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았어도 ‘쓸 수 없구나’ 포기한 경우가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25,000건의 데이터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상위 0.1%의 표준적인 데이터베이스 3개만 골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만이라도 완벽하게 융합이 되도록 해보고, 이를 통해 표준이 생기면 다른 데이터들을 연동하는 방식이 전수조사보다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는 나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제안합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혁신창업이 가장 중요하므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재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 만인창업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보고, 비용 0원으로 실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부처에서 협업을 통해 이러한 창업 기반과 데이터를 제공해야 혁신창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양순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년 전에 오픈스퀘어-D에서 창업하려는 젊은 친구들과 소통 시에,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기도 어렵고, 활용 할 수도 없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데이터에 관련된 비즈니스는 접자’ 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저는 기업 입장에서 “쓰레기 데이터가 아니라 가치 있는 데이터를 공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미량 위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은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 개방지수 1위 라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품질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제하여 정교화, 무결성 등을 확보하고 linked data 연결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2기 활동 때, 우리의 개방 정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전체 모수가 궁금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전체 데이터 모수에 대한 확인과 함께 데이터 실무단에서의 질적인 관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수조사의 대상이 약 17,000여 개의 정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으나, 범정부 EA포털과 비교하여 최종 수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밀사항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지, 조사대상을 산정할 때 그러한 절차적 고려가 있었는지 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자료 129쪽 마지막에 “국가안전보장,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한다” 고 되어있는데 모수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개방할 수 있는 경계가 명확해져야, 그 범위 내에서 개방 확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윤소라 위원) 새로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쉽게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등이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시에 제일 어려운 부분을 여성벤처협회의 회원사에게

물어보았더니, 기관 간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스타트업이 활용하려면 데이터 가격이 비싸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리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검색기능 및 Open API 제공 강화, 표준화 추진 등 지난 2월 1차 회의에서 제기한 주요 의견들이 ‘2018년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국가 데이터맵 및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시행계획 전반을 보면 굉장히 의욕적이며, 하나하나 엄청나게 큰일인데, 실제 국민과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시행계획의 실행을 제가 책임지고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봐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데이터 활용이 왜 저조한지, 특히 청년창업의 성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청년창업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청년들, 아마추어 프로그래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재미있게 놀다가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들이 주위에 의외로 인기가 있으면 창업을 합니다. 먼저 창업을 목표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정부가 잘 갖추어 주면 그 다음에 창업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서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서 2 차례에 걸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참여하여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꽤 유의미한 진전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법체계에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 아카이브 용도나 통계, 연구 및 학술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목적 외에 양립 가능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결합에 대

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조건이 되면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라는 시민단체 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된 내용은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보내어진 상태이고,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해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어 데이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홍기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구나 공공의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분야에서는(바이오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이 데이터가 비식별화 되어 있어도 접근할 때에는 데이터 윤리와 관련된 심의를 받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비식별화 정보도 결합이 되면 사적인 정보들이 다 노출 될 수 있어서, 창업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윤리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품질을 위해서 데이터 큐레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양질의 데이터는 큐레이션 과정을 거쳐 큐레이션 센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입니다. 비즈니스에서 활용을 위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R&D와 데이터 큐레이션 R&D를 수행할 중간단계의 R&D 담당기관이 필요합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위원회에 많이 참석했었는데 오늘같이 열린 위원회는 처음 봤습니다. 많은 위원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외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 아쉽다라고 하였던 데이터 개방 건수나 표준화, 품질 개선 방안 등이 8개의 과제에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표준화 및 품질 강화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는데, DB 표준화지침 개정은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과제인 접근성 강화 중 용이한 검색기능 구현은 장애인, 비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 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혁신창업 지원에서 해외시장진출 지원 부분은, 수동적인 지원보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해외진출이 참 용이하겠다” 라는 적극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도 자치단체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를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종시 행정부시장) 지방 등 현장에서는 데이터 개방에 중점을 두고 보다 많은 데이터 개방에 신경을 썼는데 후에는 새로운 데이터, 부가적인 데이터를 생산하라고 요구할까 우려가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급차 도달취약지구, CCTV사각지대 도출 등 표준분석모델 확산 추진시 실제 현장 종사자인 소방, 경찰공무원등의 경험칙과 비교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고의 한계와 성과를 도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최광웅 위원) 청년혁신창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면, 대졸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는 방식보다 데이터 표준화 관련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요즘 대다수 청년이 IT분야에 능통한데, 정부나 국회에서 보관 중인 종이문서들 중 좋은 자료를 데이터로 표준화하여 구축하는 청년공공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사업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나, 우리는 겨우 금년 예산이 1,752억 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지식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통계청장님이 말씀하신 데이터 간의 융합은 굉장히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 각 지자체가 개방하는 데이터들을 한군데 모아서 데이터 간의 융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 (조성준 위원장) 열띤 안전 심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1차 회의 때 회의록을 공개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하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또한, 5월 15일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전략위, 실무위, 전문위원회 위원님들과 오늘 못다한 말씀이나 제안들을 하루종일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안부 장관 마무리말씀) 공공데이터정책 추진에 있어 걸림돌 및 미래 트렌드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국가의 유용한 자원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간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데이터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처간 벽이 있는데 이를 허물어 의미있는 데이터를 만들도록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